주유소서 담배 폈다간 '과태료 500만원'

소방청 '위험물안전과리법' 개정
흡연 금지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하위법령 마련해 7월31일 시행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은 따로 정한다. 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흡연을 금지했지만 이를 더 명확히 했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도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면 기자

전자담배 금연광고가 흡연권 침해?…1심 "덜 해로운 담배 없어" 기각

서울중앙지법, 흡연자인권연대 청구 전부 기각
"금연광고 위법성·원고 손해인정 어렵다" 판단
연대 "전자담배, 건강 덜 해치고 니코틴 대체"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가 흡연권과 명예권 등이 침해됐다며 정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정부 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연대·박모씨 외 12인)이 건강증진개발원(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자담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지난 2022년 1월 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흡연권,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 여부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치며 전자담배를 니코틴 대체재 또는 금연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와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대한금연학회 성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궐련형 전자담배(Heated Tobacco Products)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대해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과학적 검증에 기초하여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에 대해서도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아동, 청소년 및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 감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다각적인 협력과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유나 기자

5월31일까지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안전관리 최선"

오는 20일~5월31일까지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

행정안전부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를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봄꽃 개화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작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대책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이 기간 동안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지역축제에 대한 신속한 상황 공유체계를 유지한다.

우리나라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국지 돌풍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화재 및 강한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 열기구·패러글라이딩 등의 추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축제 인파규모 및 개최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체계도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축제 35개소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에서는 간부 공무원을 파견해 시군구 단위에서 관할 경찰·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점검한다.

인파관리대책, 봄꽃 사진명소 안전조치, 구조·구급계획 등 각 안전관리 분야별 미흡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3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봄철에 강한 돌풍으로 발생한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불꽃놀이, 열기구 체험 등 부대행사시 안전관리 철저히 할 것 당부했다.

또 지역축제 방문 인파가 행사장 방문 전에 인파 운집, 화재 등 축제장의 위험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인근 톨게이트 전광판, 지하철 전광판, 재난문자 등을 활용한 안전정보 송출체계도 잘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이 봄철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테러범을 제압하라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통공사 사당별관에서 열린 수도방위사령부 자유의 방패 연습 테러대응훈련에서 52사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특임대원들이 테러범 진압을 위해 건물에 진입하고 있다.

'몸캠·메신저피싱' 9억대 갈취 中총책…2년반만에 검거해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다양한 피싱 수법으로 9억여원을 뜯어낸 챙긴 50대 중국 피싱조직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 피싱조직 총책 A(51)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을 이용해 B씨 등 59명으로부터 29차례에 걸쳐 모두 9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투자사기 등 여러 유형의 피싱 범행을 총괄·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통장모집, 자금관리 등 역할을 맡은 중국과 국내 활동 하부조직원을 통솔하며 범죄 수익을 관리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공범인 국내 총책 등 피싱조직원 8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미 중국으로 도주한 뒤였다.

이에 여권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고 계좌분석을 통해 여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2년6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 1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며 "추가 공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쏘카, 공영주차장 이용 업무협약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8일 차량 공유업체인 ㈜쏘카와 공영주차장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슬비 기자

담양경찰 수북파출소, 공동체 치안 자문단 간담회 개최

담양경찰서(서장 권현오) 수북파출소(소장 전계안)에서는 지난 12일 참여치안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자문단(공·치·단)을 구성하여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담양=박종영 기자

영암경찰,'당직자 비상동보장치 경연대회'개최

영암경찰서(서장 윤주현)는 12일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경찰관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당직자 비상동보장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나주경찰 봉황파출소, 주민 친화적 정성치안 활동 전개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 봉황파출소는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민 친화적 정성 치안 활동으로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였다.

나주=송준표 기자

광주 동부소방, 본서 주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 소방력의 유연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주거용 복합건축물 3곳을 대상으로 최근 본서 주관 무각본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헸다.

서선옥 기자

완도해경,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 개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11일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위해 유관기관 간 합동회의(전남도청 등 5개 기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